문 4.(배점 2)

헌법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원칙으로, 이러한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재량이 인정될 수 없다.
- ② 과잉금지원칙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방법의 적정성 심사의 내용은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인가 하는 점이 아니고,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가 하는 점이다.
- ③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④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⑤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은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문 5.(배점 2)

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민주화와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정치의 독점이나 무소속후보자의 진출을 봉쇄하는 정당의 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② 이른바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 간 동일성원리에 입각한 신임투표제적 민주주의라고 주장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헌법에서 정당국가적 경향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 ③ 정당공천에서 탈락한 자가 그 공천과정의 비민주성을 이유로 정당공천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임·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 범위에 해당한다.
- ⑤ 입법자는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배분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법정책적인 재량권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현재의 각 정당들 사이의 경쟁 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문 6.(배점 2)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 영역은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적 요청이다.
-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은 공유수면에도 미친다.

문 7.(배점 2)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산권을 형성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면서 그 행사기간을 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이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그 입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
- ③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위헌심사기준으로 비례성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 ④ 개별 재산권이 갖는 자유보장적 기능이 강할수록, 즉 국민 개개인의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이 되는 정도가 강할수록, 그러한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수용된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피수용자가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부정되지 않는다.

문 12.(배점 3)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의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개인에게 현저히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재산의 다과에 의하여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 ㄷ.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ㄹ.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표방이 금지되어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
- ㅁ. 외국인이라도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19세 이상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투표권을 가진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ㄷ
- ③ ㄴ, ㄷ, ㄹ, ㅁ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⑥ ㄷ, ㄹ
- ⑦ ㄴ, ㄷ, ㄹ ⑧ ㄹ

문 13.(배점 4)

甲과 乙은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정부형태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甲은 다음 <보기1>에 설명된 내용을 본질과 원리로 삼는 정부형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乙이 이러한 甲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주장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1>

- 집행부가 이원적 구조를 가지며,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된다.
-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한다.
- 입법부와 집행부 간 공화와 협조의 관계가 유지된다.

<보기2>

- ㄱ. 이 정부형태의 전형적인 모델에 의하면,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이른바 동거정부가 성립할 경우 양자 간 권력배분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 ㄴ. 이 정부형태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정치인에게 투철한 공직의식이 요구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확신하기 어렵다.
- ㄷ. 이 정부형태는 책임정치의 구현에 미흡하다.
- ㄹ. 이 정부형태를 채택하면 의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데, 의회가 정권획득을 위한 지나친 경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ㅁ. 이 정부형태에서는 군소정당이 난립하거나 정치인들의 타협적 태도가 결여될 때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국민 간의 동질성이 약화되어 타협과 합의의 정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 ① ㄱ, ㄹ ② ㄱ, ㄴ, ㄷ
- ③ ㄴ, ㄹ ④ ㄱ, ㄹ, ㅁ
- ⑤ ㄴ, ㅁ ⑥ ㄴ, ㄷ, ㄹ
- ⑦ ㄹ, ㅁ ⑧ ㄴ, ㄹ, ㅁ

문 14.(배점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약식재판뿐만 아니라, 즉결심판에 의한 즉결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③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⑤ 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집단적·흥기휴대적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 15.(배점 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임기 개시 전의 대통령 당선자(당선인)도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지명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상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에 앞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국무총리는 관계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부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나, 국무총리의 문민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따라, 군사에 관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는 행정 각 부의 사무를 기획·조정하는 업무와 특정의 부에 속하게 할 수 없는 성질의 사무 등 자신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직무를 처리한다.
- 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규정이 있다고 하여, 모든 행정기관이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문 19.(배점 4)

아래의 대화를 헌법적으로 판단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향 친구들인 甲, 乙, 丙, 丁은 어느 날 서울 시내 술집에서 향우회를 하다가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하였다.

甲: 우리 아들이 총을 들고 전투훈련을 하는 것은 자기 양심에 반한다면서 입영통지를 받고도 군대에 안 가고 있어 큰 걱정이다. 내가 아는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의장한테 군대 가는 것 대신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연락이 오기를, 현재로서는 국민감정상 안 된다고 한다. 법대 다니는 옆집 아들 말로는, 헌법에 보면 청원권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헌법소원이라도 내야겠다.

乙: 며칠 전 밤 퇴근길에 국회 앞을 지나가는데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기에 네 아들 생각이 나서 참가했다. 그런데 경찰이 불법집회라면서 사람들을 연행하였다. 나도 근처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는데, 화장실의 가림막이 너무 낮아서 용변을 볼 때마다 창피해 죽을 뻔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용변을 참았다.

丙: 다음 주에 조기축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축구시합이 있다. 며칠 전에 연습 좀 하려고 우리 집 옆에 있는 국립 ◇◇대학교에 운동장을 좀 쓰자고 신청을 했는데, 학교가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더라.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가 국민에게 운동장도 안 빌려주느냐.

丁: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열 손가락에 잉크를 발라서 서류에다가 찍더라. 나도 옛날에 찍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딸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더라. 나는 별 생각 안 하고 찍었는데, 요즘 애들은 좀 다른 것 같다.

ㄱ. 甲의 경우에는 청원에 대한 회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하다.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ㄴ.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경우, 법익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현할 수는 없고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ㄷ. 乙이 ○○경찰서장을 상대로 위와 같은 유치장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乙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ㄹ.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헌법에 위반된다.

ㄱ. 국립 ◇◇대학교는 특정한 국가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이므로,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운동장사용신청불허가결정으로 인하여 丙이 ◇◇대학교 운동장에서 축구연습을 하지 못했으므로, 위 결정은 丙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한 공권력행사이다.

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을 의미하므로, 지문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ㄱ
- ③ ㄱ, ㄴ, ㄷ, ㄹ, ㄴ
- ④ ㄱ, ㄴ, ㄹ, ㄱ
- ⑤ ㄱ, ㄴ, ㄹ
- ⑥ ㄴ, ㄷ, ㄹ
- ⑦ ㄹ, ㄱ, ㄴ
- ⑧ ㄷ, ㄱ, ㄴ

문 20.(배점 2)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로서,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ㄴ.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고, 허위보도를 정정하는 것은 진실보도의무를 부담하는 언론사가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심리를 가처분절차에 의한다고 하여 신문사업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 국가가 개인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반면,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ㄹ. 음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음란으로 판단되는 표현을 표현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시킨다는 것은 그와 관련한 합헌성 심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음란표현도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ㄱ.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ㄱ
- ③ ㄹ, ㄱ
- ④ ㄴ, ㄷ, ㄹ, ㄱ
- ⑤ ㄷ, ㄱ
- ⑥ ㄱ, ㄷ, ㄹ, ㄱ

문 21.(배점 2)

조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③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는 사전동의권을 가진다.
- ④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 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관이 강제집행의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국가는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문 22.(배점 2)

입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양원제의 경우 무엇보다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신중을 기함으로써 단원제가 초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상의 경솔과 졸속을 피할 수 있으며, 의회가 두 개의 합의회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의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 ② 공청회는 단순히 참고의견을 듣는 것이므로 진술인의 출석이나 선서를 강제하지 못하는 반면에, 청문회는 증인·감정인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출석·선서 및 증언을 강제할 수 있고 위증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도 있다.
- ③ 징계사유가 되는 국회의원의 행위는 반드시 국회의사당 내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또한 회기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전(前) 회기 중의 행위나 폐회 중의 행위도 포함한다. 징계로 제명된 자는 국회의 제명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④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의회는 회기 중에만 활동능력을 가지며 매 회기마다 독립된 의사를 가지므로 전(前) 회기의 의사가 후(後) 회기의 의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한 우리 국회법의 논리와 상이하다.

문 23.(배점 2)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에 그 행사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일반국민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대법원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ㄷ.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남북정상회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급한 필요에서 비롯된 이른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ㄹ. 헌법재판소는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ㅁ
③ ㄱ, ㄷ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ㅁ	⑥ ㄴ, ㄷ, ㄹ, ㅁ
⑦ ㄷ, ㄹ	⑧ ㄱ, ㄴ, ㄷ, ㄹ, ㅁ

문 24.(배점 2)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고, 국회의원의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도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영구면책특권이다.
- ②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체포유예의 특권이고, 형사소추를 면제하는 특권은 아니다.
- ③ 불체포특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체포 또는 구금은 형사소송법상의 체포·구금을 말하고 행정상의 강제조치인 보호조치나 감호·격리처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④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후 국정감사장을 떠나면서 함께 동행했던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
- ⑤ 국회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지역구에 가서 지역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보고회에서 발표하는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

문 33.(배점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ㄱ.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하나, 현재 이미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경우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문제되므로, 헌법재판소는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고 있다.
- 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등 실제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 ㄷ.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어떠한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 이외에 그 조항으로 인하여 제3자의 기본권도 침해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경우, 기본권의 실효적 구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제3자의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
- ㄹ.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 ㅁ.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규범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 제3자에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직접적인 수급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ㄹ, ㅁ
-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ㄷ
- ⑤ ㄴ, ㄷ

문 34.(배점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ㄱ.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적용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격상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 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소위 한정위헌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하고 있다.
- ㄷ. 당사자의 위헌 여부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같은 심급에서 다시 제청신청을

- 할 수 없으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심급에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
- 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아니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므로 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심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현재성 및 자기관련성의 유무는 심판청구의 적법성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ㄹ
- ③ ㄱ, ㅁ ④ ㄴ, ㄹ, ㅁ
- ⑤ ㄴ, ㅁ ⑥ ㄷ, ㄹ, ㅁ
- ⑦ ㄷ, ㄹ ⑧ ㄴ

문 35.(배점 4)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식품제조업자 甲은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후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한 천연차에 그 특허표시인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표시를 한 음료제품을 출시하였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7조의 '음주전후, 숙취해소 표시 금지' 규정(이 사건 규정)에 따라 동 제품에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甲은 이 사건 규정이 자신의 재산권, 발명가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 ㄱ. 어떤 제품을 섭취 또는 복용함으로써 음주 후의 숙취를 해소시킬 수 있다면 이는 그 제품의 약리작용에 의한 것으로서 '숙취해소'라는 표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므로, 甲이 올바르게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ㄴ. 甲이 숙취해소용 식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그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므로 이 사건 규정은 甲의 직업행사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ㄷ. 甲이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에 발명의 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실시권에 내재된 요소이지만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반면,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취지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서 발명의 명칭에 해당하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제한하는 이 사건 규정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ㄹ.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는 식품판매를 위한 상업적 광고표현에 해당하고, 상업적 광고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므로, 이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④ ㄱ, ㄴ
- ⑤ ㄱ, ㄴ, ㄷ ⑥ ㄴ, ㄹ
- ⑦ ㄴ, ㄷ, ㄹ ⑧ ㄷ, ㄹ

문 40.(배점 3)

헌법해석과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데 관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비관이 제기되나, 헌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객관소송의 일종이므로, 당해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그 심사기준이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 ③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헌법합치적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의 규범적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은 맞물려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헌법수용적 한계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한계로 인정할 수 없다.
- ④ 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경우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본래의 취지보다 다소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근거 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이하 여백